

2025-02
ISSUE PAPER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서채원

2025.12.

2025-02

ISSUE PAPER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서채원

2025.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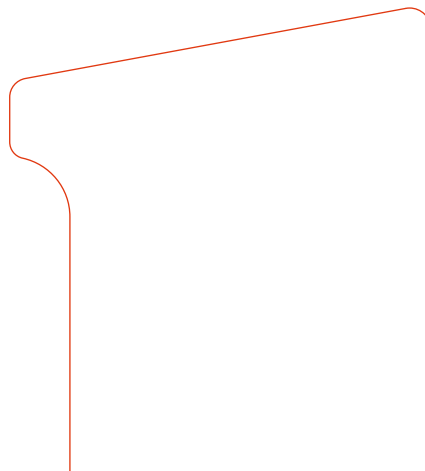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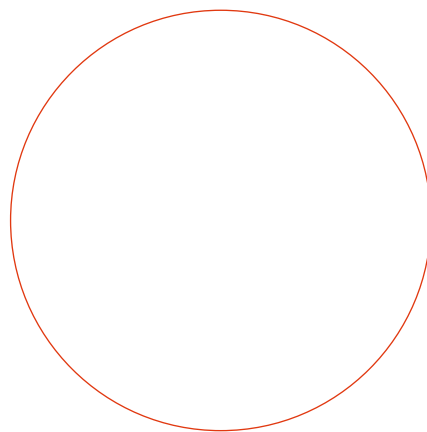


2025-02

ISSUE PAPER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서채원



I. 연구배경 및 목적	04
II.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개념	08
III. 타 지자체 재정사업 성과관리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	12
1. 서울시: 예산 편성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조정 체계	13
2. 인천시: 재정·보조사업 이원화 및 투명성 관리 체계	14
3. 부산시: 연구개발(R&D) 특화 정책-투자-평가 종합체계	16
4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시스템 정립을 위한 시사점	18
IV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현황	20
1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현황	21
2. 현행 평가체계의 제도적 한계	26
V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향	28
1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정책적 의미	29
2. 향후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운영방향	30
참고문헌	32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
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I. 연구배경 및 목적

I 연구배경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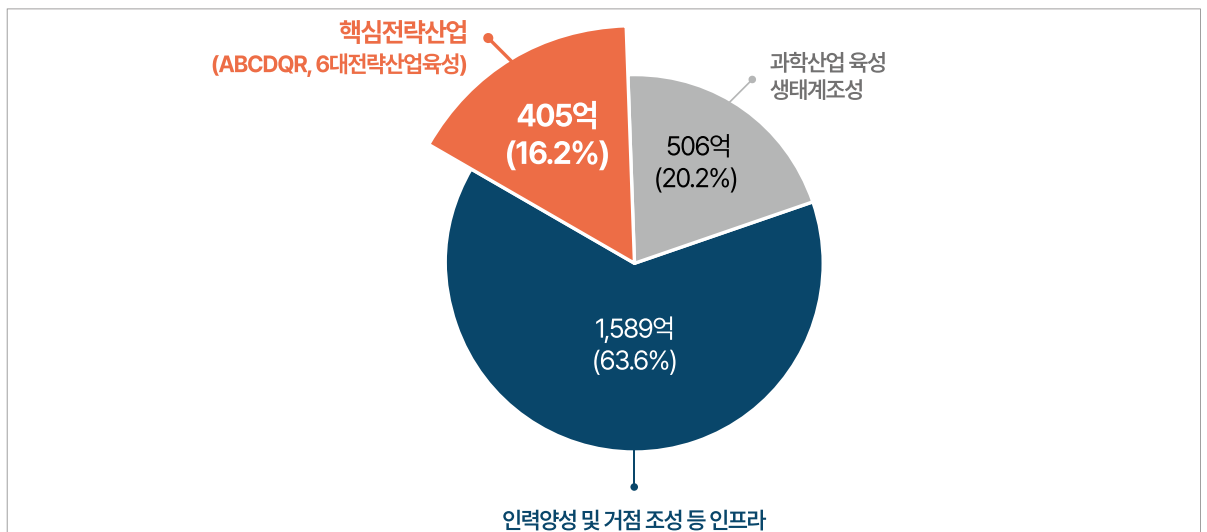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대전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전략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과학기술·산업 혁신 도시이나, 보유역량을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전환하는 연구혁신(R&I) 투자구조의 한계 노출
- 대전시는 6대 전략산업(우주·바이오·반도체·국방·양자·로봇) 육성을 추진 중이나, 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연구혁신(R&I)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
- 최근 3년간 연구혁신(R&I) 예산은 3,142억원('22) → 2,307억원('24)으로 약 26% 감소하였으며,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3.8% → 2.8%로 축소되어 '선택과 집중'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이 절실한 시점

[표 I-1]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투자현황(2022~2024)

연도	대전시 전체 사업		R&I사업			
	예산(A)	사업 수(B)	예산(C)	비중(C/A)	사업 수(D)	비중(D/B)
2022	82,642억원	2,986개	3,142억원	3.8%	230개	7.7%
2023	77,193억원	3,052개	2,545억원	3.3%	231개	7.6%
2024	80,998억원	2,958개	2,307억원	2.8%	217개	7.3%

출처: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(DAON) (<https://daon.distep.re.kr/data/ri-biz/result>)

- 2025년 과학기술 예산 중 6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16.2%(405억) 수준에 그치는 반면, 인력양성 및 거점 조성 등 인프라성 예산이 약 63.6%(1,589억) 차지,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성과 점검과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



[그림 I-1] 2025년 과학기술 예산 투자구조 현황

출처: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

- **(문제점) 육성 대상 산업은 확대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성과 기반 관리·환류 체계가 미흡한 상황**
 - 투자 기준의 모호성: 연구혁신(R&I) 사업에 대한 명확한 투자 가이드라인과 공통 성과지표가 부재해 개별 사업이 대전시 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 부족
 - 성과-예산 연계 단절: 중앙정부 및 일부 타 지자체가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갖춘 것과 달리 대전시는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 간 제도적 연결고리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
- **(목적) 본 이슈페이퍼는 2025년 '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'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혁신(R&I)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**
 - 표준화된 성과평가 체계 마련: 연구혁신(R&I)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략산업별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 제공
 - 지역 특화 연구혁신(R&I) 종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: 중앙정부의 기능별(R&D, 산업 육성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) 평가를 넘어 R&D와 비R&D(인프라·인력 등)가 결합된 '대전형 연구혁신(R&I) 포트폴리오 평가 체계' 제도화
 - 환류 시스템 안착 및 효과 극대화: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조정과 직접 연계하여 성과 기반 투자 선순환 구조의 조기 안착 유도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
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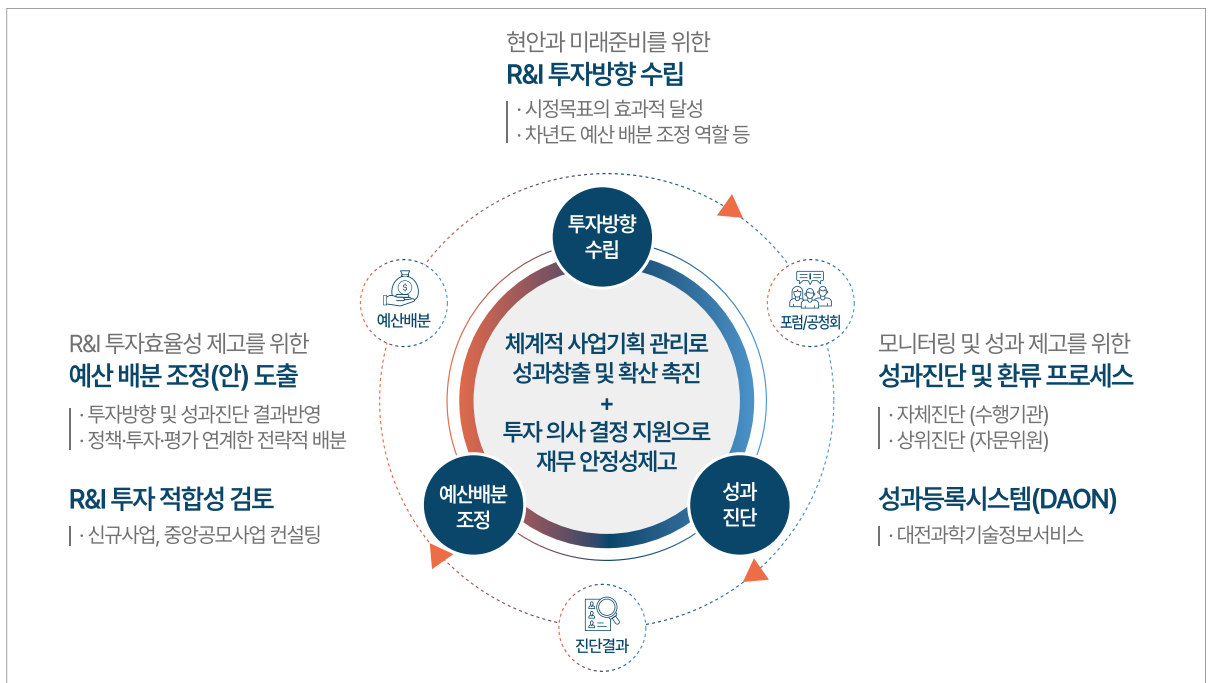
II.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개념

II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개념

○ 연구혁신(R&I*) 성과평가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선순환체계**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핵심 관리 수단

* R&I(Research&Innovation)

** 대전시 과학·산업 분야 예산투자 사업의 효율적·효과적 이행을 위한 사전기획-운영-관리-평가-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의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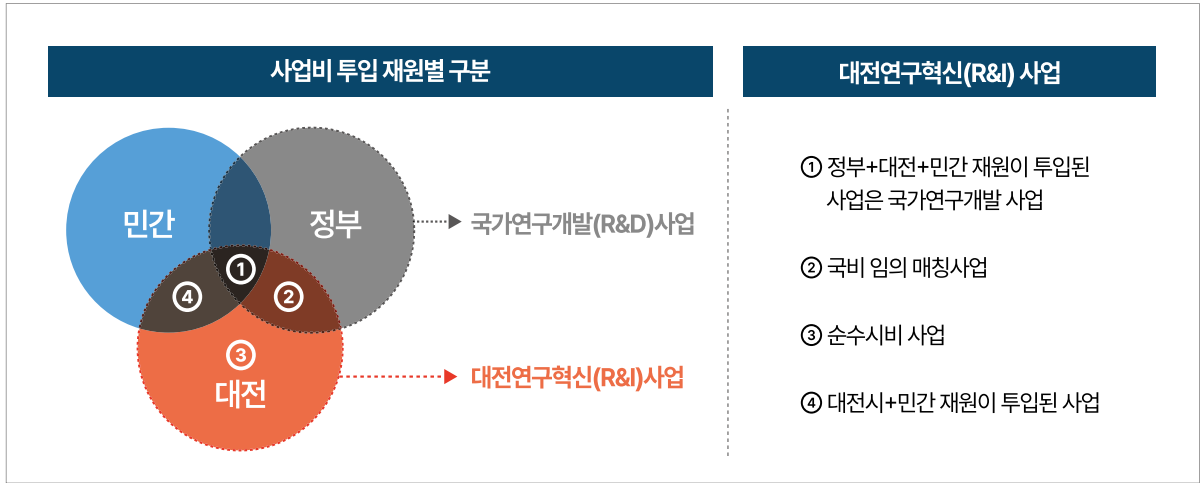
[그림 II-1] 대전 연구혁신(R&I) 투자 선순환 체계 개념도

- **(R&I개념)** 대전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·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원사업(R&D 및 비R&D)을 총괄하는 개념이며, 사업 특성에 따라 7개 유형*으로 구분

* ①기술개발, ②기반구축, ③성과확산, ④정책개발, ⑤인력양성, ⑥자금 지원 및 투자, ⑦기관 운영비

- **(사업범위)** 연구혁신(R&I) 사업은 지자체 예산자료 기반 지방재정365 사업자료의 5대 기능*에 해당하는 사업 선정 후, 전문가 및 대전시 사업담당자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

* 환경, 보건, 농림해양수산,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, 과학기술



[그림 II-2] 대전 연구혁신(R&I) 사업 범위

• (선정절차)

[표 II-1] 대전 연구혁신(R&I) 사업 선정 절차

R&I사업 선정절차	내용	비고
사업 자료 수집	- 지방재정365 사업자료 - 세부사업별 세출현황(대전본청 회계 전체) - 시 재정정보 공개자료	사업별 12대 기능으로 구분
R&I 대상사업 1차 선정	- 지방재정 365 사업자료의 12대 기능 중 5대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 선정	5대 기능 : 환경, 보건, 농림해양수산,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, 과학기술
2차 선정	- 내·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R&I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유형*별로 분류	외부 전문가(KISTEP, 충남대, 대구연지단 등) 및 DISTEP 연구진 검토
R&I사업(안) 검토	- 시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R&I사업(안) 검토	R&I사업, R&I유형, R&D 해당 여부 검토, R&D유형, 전략산업 분류 등
R&I사업 선정	- '20~'23년 기준 833개 사업 선정	'20~'23년 시 세부사업 11,548개(2조 7,674억 원) 중 833개(9,788억 원) 선정

-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는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, 사업 기간, 지자체 예산 비중,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
- 이는 사업 간 성과비교 가능성과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준

III. 타 지자체 성과관리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

III 타지자체 성과관리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

- 서울·인천·부산 등 주요 지자체는 재정사업 및 연구개발(R&D)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, 평가결과를 예산편성·사업 구조조정·정책 조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연계하여 활용

이들 사례는 평가대상 선정 기준, 평가지표 구성 방식, 평가-예산 간 환류 구조 등 성과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공통 요소와 운영 원리를 보여주며,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정립 및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준거로 활용 가능

1

서울시: 예산 편성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조정 체계

- 서울시는 재정사업 전반에 단계별 성과평가체계를 정착시키고, 평가결과를 예산편성·조정과 연계하여 재정운영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운영 중

- **(평가목적)**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, 모든 행사성 사업, 5억 원 이상 기타사업을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하며, 행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제외
- **(평가대상)**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, 모든 행사성 사업, 5억 원 이상 기타사업을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하며, 행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제외
- **(평가방식)** 사전-사후 구조의 정례화된 성과평가 체계로, 자체평가-예산담당관 검증-외부전문가 평가-심층평가로 이어지는 다단계 절차로 구성됨. 복합사업은 유형별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
- **(평가지표)** 사업 유형별로 계획-관리-성과-환류의 3단계 구조로 단순·표준화되어 있으며,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. 사업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 설계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
- **(환류체계)**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 구조조정에 직접 연계될 뿐 아니라,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·지표의 조정·개선에 반영되는 구조적 환류체계로 운영
- **(차별점)** 서울시는 자체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고, 결과를 5단계 등급(매우 우수-우수-보통-미흡-매우미흡)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
 -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10% 이상 삭감 또는 구조조정·일몰 등을 추진하고, 우수 사업은 자원 재배분의 우선 대상으로 활용
 - 예산이 집중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구조조정·효율화 조치를 병행하여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

○ 서울시 사례를 통한 시사점

- 평가결과에 따른 대한 예산 삭감, 구조조정, 일몰 등 사후 조치 기준을 사전에 명문화하여, 평가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한 운영 방식
- 성과평가 대상을 사업 단위가 아닌 부서·사업군 포트폴리오 단위로 묶어 평가함으로써, 유사·중복사업 정비와 재정사업 구조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

2

인천시: 재정·보조사업 이원화 및 투명성 관리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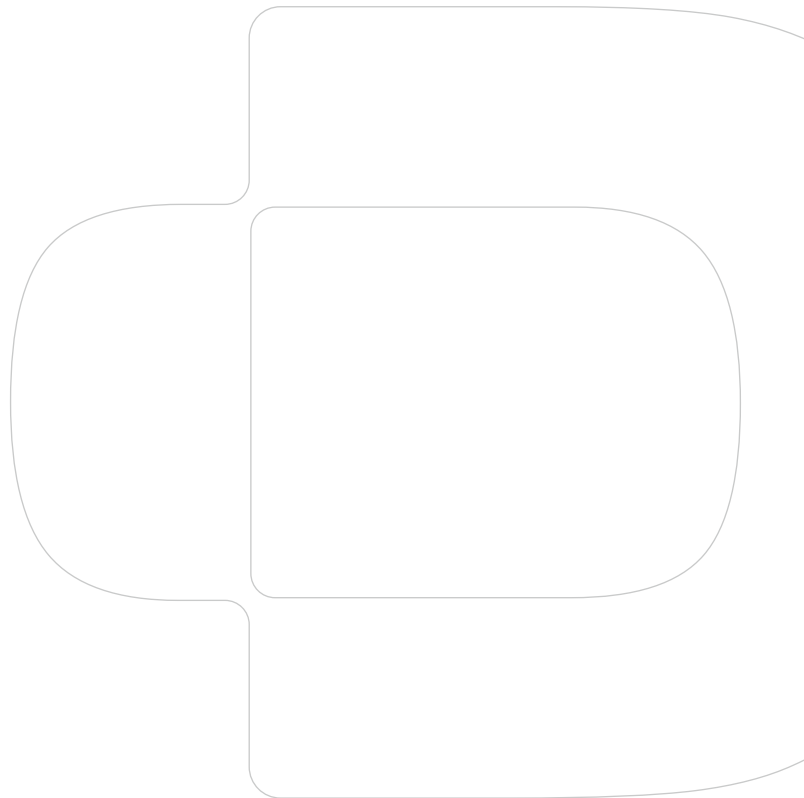
- 인천시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을 아우르는 이원화된 성과평가체계를 운영하며, 평가결과를 예산편성·조정과 보조금 관리에 연계하여 재정운영 전략성과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 중
- **(평가목적)**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성과평가를 적용하여 성과 기반 예산운동을 정착시키고, 보조금 집행 과정의 효율성·책임성·투명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
- **(평가대상)** 재정사업은 「지방재정법」 기준에 따라 선정된 209개 사업, 지방보조사업은 「지방보조금법」 기준에 따른 3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, 행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여 평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
- **(평가방식)** 자체평가-부서 검증-외부전문가 평가로 이어지는 다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, 보조사업은 교부-집행-정산 전 과정을 관리 범위에 포함하며, 복합·혼합 사업은 유형별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 적용
- **(평가지표)** 재정사업은 계획-관리-성과-환류 중심의 표준화된 지표체계를 활용하고, 보조사업은 교부 적정성-집행 관리-정산 결과 중심의 지표체계를 적용
- **(환류체계)**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 구조조정에 직접 연계하고,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조정·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운영
- **(차별점)**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을 구분·통합 관리하는 이원화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,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집행 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점이 특징

○ 인천시 사례를 통한 시사점

-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맞춰 서로 다른 평가 기준과 지표를 적용함으로써, 사업 성격에 따른 평가의 적합성을 높인 사례
- 평가 과정에 부서 면접 조사와 의견 공유 절차를 포함하여, 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의 이해도와 실제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인 운영 방식

○ 서울시·인천시 사례 종합

- 서울·인천은 연구혁신(R&I) 분야에 특화된 성과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, 지자체 성과평가 체계가 갖추어야 할 공통 요소와 운영 원리를 제시
 - 평가대상 선정의 공정성
 - 표준화된 지표체계
 -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절차 명문화
 - 부서 간 협력 기반의 환류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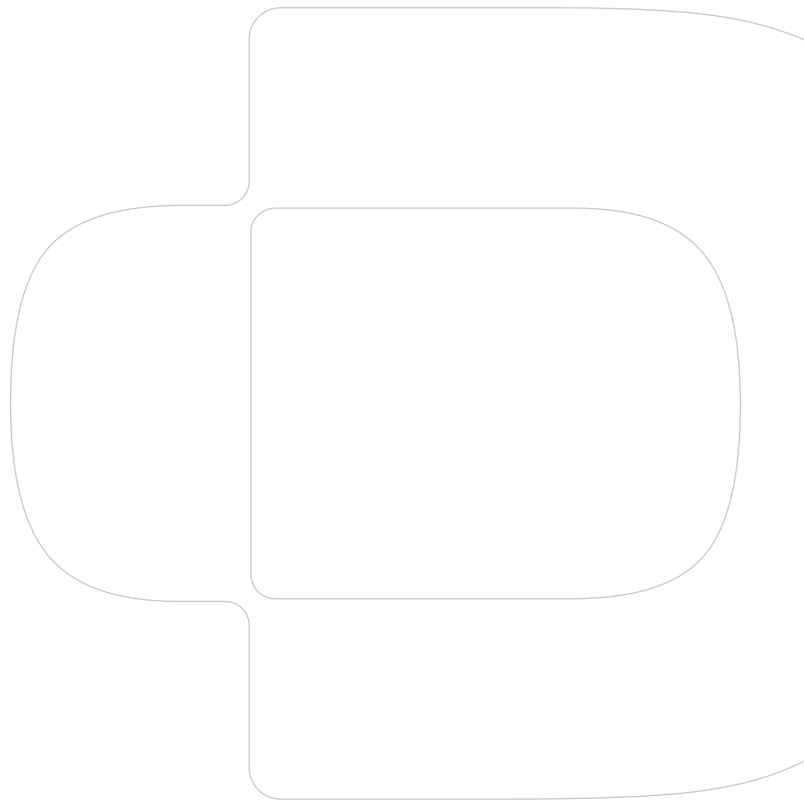


3 부산시: 연구개발(R&D) 특화 정책-투자-평가 종합체계

- 부산시는 연구개발(R&D) 분야에 특화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, 기술개발·기반조성·사업화 등 R&D 사업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평가와 전문가 중심 점검을 통해 정책-투자-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중
- **(평가목적)** 부산시는 연구개발(R&D)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, 지역경제 기여도, 사업화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,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전략적 예산투자를 목표로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
- **(평가대상)** 부산시 연구개발(R&D) 예산이 투입된 국비임의매칭 및 시 자체사업 중 4년 이상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선정하며 의무매칭·신규사업·연평균 시비 1억 미만 사업 등은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 대상을 확정
- **(평가방식)** 사전·사후평가를 결합한 다단계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며, 성과보고서 제출 이후 서면 적절성 점검과 대면 확인·점검을 병행하는 전문가 중심 평가방식 적용
 - 기술성, 시장성, 지역기여도 등 연구개발(R&D) 특성을 반영한 평가요소를 통해 기술성과와 정책적 전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
- **(평가지표)** 관리·성과·효과 중심의 기본 지표에 지역 파급효과 등 전략지표를 결합한 연구개발(R&D) 전용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기술 가치와 사업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
- **(환류체계)** 평가결과를 차년도 연구개발(R&D) 예산 배분·조정 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고, 성과 수준에 따라 예산 증액·유지·감액을 차등 적용하는 환류체계 운영
 -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평가결과가 사업 지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정착
- **(차별점)** 연구개발(R&D) 분야에 특화된 평가체계로 기술개발·사업화 중심 지표를 적용하고, 전문가 기반의 서면-대면 병행 평가방식을 운영하며 장기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대상 선정과 강한 예산연계 환류체계를 통해 타 지자체 대비 연구개발(R&D) 특화성이 뚜렷한 성과평가 모델 구축

○ 부산시 사례를 통한 시사점

- 부산 사례는 대전시 연구혁신(R&I) 평가체계와 가장 구조적으로 유사한 선행모형으로, 다음의 핵심 시사점을 제공
 - 연구혁신(R&I)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·전문가 중심 평가체계 구축 필요
 - 정량·정성·전략지표의 균형적 설계와 근거 기반 평가 강화
 - 평가결과를 예산과 강하게 연계하는 정책-평가-투자 일체형 운영방식
 - 장기 프로젝트 중심 전주기 성과평가체계의 필요성
 - 단순 성과확인이 아닌 투자 효율성 제고 도구로서 평가의 기능 강화



4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시스템 정립을 위한 시사점

- 타 지자체 사례는 평가대상 선정부터 지표 구성, 평가 운영,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유사한 운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
- 서울·인천·부산 사례를 종합할 때,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체계는 평가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, 지표 구성의 보완,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확대 등 성과평가 시스템 정립을 위한 주요 검토 과제가 도출됨

[표 III-1] 타 지자체 사례와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비교

구분	서울시(재정사업)	인천시(재정+보조금)	부산시(R&D사업)	대전시(R&I사업)
평가 목적	· 성과기반 예산편성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	· 재정사업·보조사업의 성과 기반 예산운영 및 집행 투명성·효율성 강화	· R&D 성과의 질적 제고 및 전략적 연구투자 효율성 확보	· 연구혁신(R&I) 재정 투자의 효율성·효과성 제고 및 성과 기반 재정 운영체계 구축
평가 대상	· 시 재정사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/행사/기타 사업 전면 포함	· 재정사업(209개) + 보조사업(328개) 평가 (경직성 경비 제외)	· 시 R&D 예산 투입 국비 임의매칭·자체사업 중 4년 이상 계속사업 중심 선정(의무매칭·신규·연 1억 미만 등 제외)	· 과학산업 분야 성과 분석이 가능한 연구혁신(R&I) 사업 · 4년 이상 계속사업, 지자체 예산비중 50% 이상 사업
평가 방식	· 사전·사후 성과평가 체계 · 단계별 내·외부 병행평가	· 재정·보조 사업 특성에 따른 이원화 평가 프로세스 운영	· 서면·대면 병행의 다단계 평가체계	· 내·외부 전문가 참여 기반 및 전문가 대면 검토 절차 운영
지표 특성	· 사업유형별 지표 차등화로 평가 정밀도 확보	· 지표체계 이원화로 평가의 적정성·객관성 확보	· 기술성·시장성·지역기여도 기반 R&D 특화 지표	· 연구혁신(R&I) 사업 유형을 반영한 4개 분야 13개 세부지표 활용
환류 체계	· 등급화 결과의 예산편성·사업구조조정 연계 (민간위탁조정·중복사업 통합 등)	· 예산편성·조정 연계 · 차년도 사업계획·지표 개선에 반영	· 예산 증감(우수·중액 / 미흡·감액) 연계	· 평가결과 기반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운영 개선 연계
차별점	· 상대평가 기반 5단계 등급화 + 복합점수 방식 · 단계별 평가구조 기반 정교한 검증체계	· 재정사업+보조사업의 이원화 평가체계 · 교부-집행-정산 기반 집행관리 강화	· R&D 특화형 유형별·전문가 중심 평가 · 장기 프로젝트 중심 대상 선정	· 과학산업 중심 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과평가 모델 구축

○ 평가대상 선정 체계의 명확화

- 서울·인천은 예산규모·사업유형·사업연차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
- 부산은 연구개발(R&D) 특성을 고려해 장기·계속사업 중심의 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
- 연구혁신(R&I) 사업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설정하고, 기술개발·기반구축·성과확산 등 사업 특성별로 평가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 필요

○ 사업유형별 표준 지표체계 구축

- 서울·인천은 계획-관리-성과-환류 중심의 단순·표준화된 지표체계를 통해 사업 간 비교 가능성과 평가 일관성을 확보
- 부산은 정량지표와 정성·전략지표를 결합한 R&D 특화 지표체계를 통해 기술 가치와 정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진단
- 사업 유형별 핵심 지표 설정, 평가 항목 간 중복 및 혼선 최소화 등을 통해 지표 운영의 기준 정비 필요
- 사업 목적과 성과 구조를 반영한 유형별 지표체계 운영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

○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 및 환류 구조 제도화

- 서울·인천은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 조정 과정에 정례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운영
- 부산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이나 사업 조정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 관리 강화를 추진
- 평가결과가 예산 편성과 연계될 경우, 성과평가는 단순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

○ 종합

- 타 지자체 사례는 성과평가가 평가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, 사업 유형별 지표 구성, 예산 연계 환류 구조를 갖출 때 정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
- 이러한 요소는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
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IV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현황

IV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현황

1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현황

○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연도별 추진경과

-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운영은 2022년 성과진단 도입을 시작으로, 2023년 성과관리 기반 고도화, 2024년 성과평가제도화-시범평가 실시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쳐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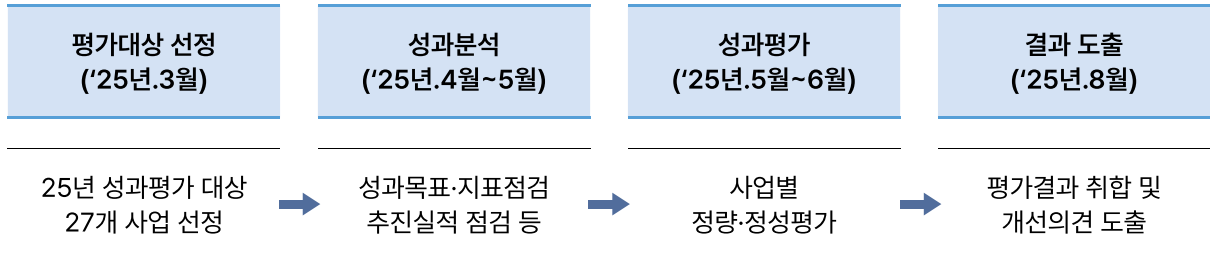
[표 IV-1]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연도별 추진경과

연도	내용
2021	<p>연구혁신(R&I) 기본 개념·유형 정립 단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전 연구혁신(R&I) 사업 정의와 7개 유형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투자-평가-환류가 연계되는 투자 선순환 체계 개념 정립 DISTEP 주관으로 수행기관 워킹그룹을 운영해 종합 매뉴얼 및 운영기반 마련 <p>→ 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 기반 구축</p>
2022	<p>최초 성과진단 도입을 통한 기초 인프라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지원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첫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대전시 최초의 사업별 성과 데이터셋 확보 성과지표의 적정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연구혁신(R&I) 사업 정의 및 유형 구분, 성과지표 Pool 구축 등을 포함한 성과진단 표준지침(안) 마련 시비 투자 적합성 검토를 시범 적용하며 투자방향-성과진단-예산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부분 가동 <p>→ 성과평가 체계의 기반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한 시기</p>
2023	<p>성과관리 기반 고도화 및 평가범위 확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별 개선방안 도출 및 성과분석 체계 고도화 창업지원 21개 사업중 11개를 대상으로 유형별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 사업운영 및 성과향상 방안 도출 성과자료 제출 기준·지표 정합성·사업군별 분석 체계 등을 정립하여 성과자료 편차·품질 문제 개선 대전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혁신(R&I) 사업 범위와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정, 평가대상군을 제도적으로 설정 <p>→ 본격적인 '성과기반 예산운영' 체계 초석 마련</p>
2024	<p>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제도화 및 시범평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대전시 연구혁신(R&I)사업 성과평가 규정」 제정으로 평가 목적·절차·역할을 공식화('24.8월) 사업유형별 평가방식을 포함한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마련('24.12월) 5개 연구혁신(R&I)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운영하여 평가체계의 적용성·개선 필요 요소 검증 <p>→ 성과평가체계 제도화 기반 마련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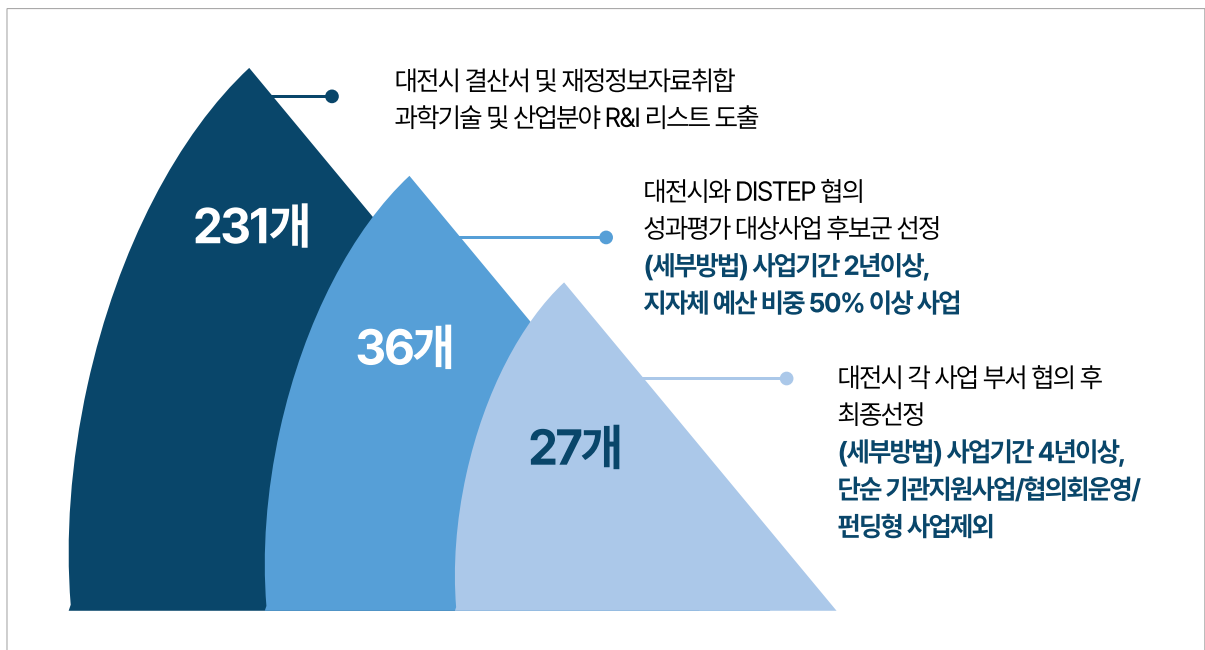
○ 2025년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추진경과

- **(추진절차)** 평가대상 선정 단계를 시작으로, 사업별 성과분석, 전문가 성과평가, 결과 도출 및 환류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추진

[표 IV-2] 2025년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평가 절차



- **(평가대상)** 대전시 과학·산업 분야 예산이 투자된 27개 사업
- **(선정기준)** 연구혁신(R&I) 대상사업(231개) 중 '23~'24년 기평가사업·일몰사업·운영비 등 지원사업 제외 하고, 사업기간 4년 이상·지자체 예산비중 50% 이상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최종 선정



[그림 IV-1] 2025년 성과평가 대상사업 선정방법

- **(성과분석)** 사업계획서·결과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성과목표 적정성·지표합리성·추진실적·성과수준 중심으로 분석
- **(성과점검)** 중앙정부 재정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준용하여, 연구혁신(R&I)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점검
- **(점검체계)** 정책(Policy)-예산사업(Project)-전략목표(Strategic Goal)-성과목표(Performance Goal)-성과지표(Indicator)의 5단계 구조를 기준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논리적 흐름을 종합 검토

[표 IV-3] 성과지표 점검을 위한 5단계 분석 체계

종합등급	내용	설명	예시
1단계	정책 (Policy)	시정비전, 핵심 산업 육성 계획 등 사업의 최상위 정책 방향성	· 과학수도 대전 · 6대 전략산업 육성
2단계	예산사업 (Project)	평가대상이 되는 개별 R&I 사업	·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
3단계	전략목표 (Strategic Goal)	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	· 로봇융합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로봇상용화 촉진
4단계	성과목표 (Performance Goal)	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구체적 목표치	· 2024년 고용창출 15명 · 2024년 매출증가율 5%
5단계	성과지표 (Indicator)	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계량/정성지표	· 신규고용(명), 매출 증가율 (%), 제품화(건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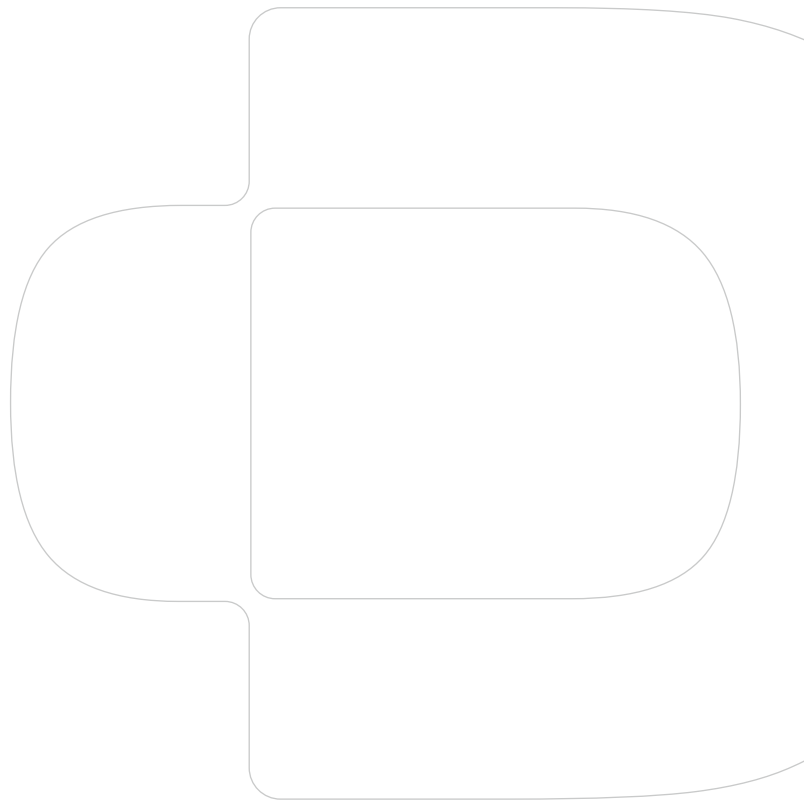
- **(점검내용)** 상위 정책 목표와 사업 목적 간 연계성,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구체화 수준, 성과목표 대비 성과지표의 측정 적정성 및 정량·정성 지표 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
- **(성과평가)**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사업 성과를 입체적으로 분석
 - 정량평가(총 100점): 적정성(20)·체계성(20)·효율성(30)·효과성(30)
 - 정성평가: 정량평가로 확인이 어려운 정책기여도·구조적 타당성·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가 판단으로 보완

[표 IV-4] 2025년 연구혁신(R&I) 사업 정량평가 지표

정량평가 지표		
평가관점	평가지표	배점
적정성 (20)	① 대전시 지원의 타당성	5
	② 사업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	5
	③ 성과 지표의 합리성	5
	④ 환경변화 대응성	5
체계성 (20)	① 사업 추진체계 적절성	5
	②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성	5
	③ 타사업과의 중복·연계 검토	5
	④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	5
효율성 (30)	① 성과의 양적 효율성	10
	② 성과의 질적 우수성	10
	③ 성과의 활용·확산 우수성	10
효과성 (30)	① 목표 대비 달성도	15
	② 경제·사회적 기여도(파급효과 등)	15
합계		100

- **(평가관점)**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구조와 운영 체계 전반을 함께 고려
 - 사업의 수요성 및 정책적 필요성
 - 사업 계획 및 추진 체계의 적정성
 - 성과 창출 구조와 사업 효율성·효과성
 - 성과 활용 및 확산 가능성, 종합 개선 의견
- **(평가 결과)** 정량평가 점수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, 정성평가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최종 성과등급(S·A·B·C·D)을 결정
- **(등급부여)** 연구혁신(R&I) 사업 간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27개 사업을 기업성장·산업기술육성·인력양성·과 학문화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, 유형별 상대 비교 평가 방식으로 등급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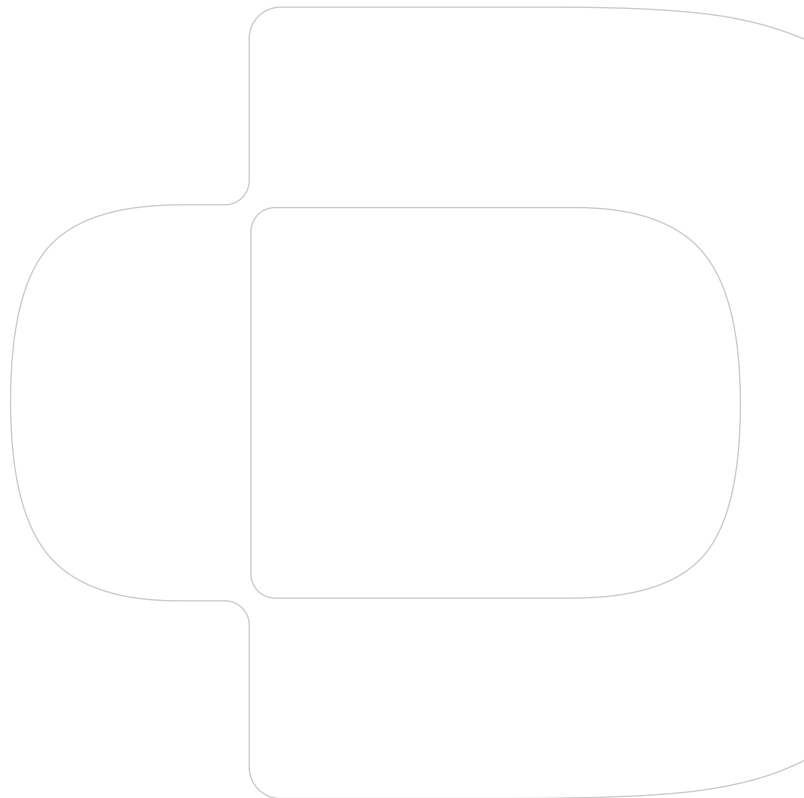
* 기업성장(18개 사업), 산업기술 육성(3개 사업), 인력양성(3개 사업), 과학문화(3개 사업)



2 현행 평가체계의 제도적 한계

- 대전시는 '22~'25년 기간 동안 연구혁신(R&I) 사업 성과진단·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성과관리 필요성과 예산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상황
 - 개별 사업 단위 성과점검을 통해 연구혁신(R&I) 사업의 관리·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
 - 특히 '25년도는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시범적 활용을 통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검증
- 다만 현행 평가체계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구혁신(R&I)사업 전반의 구성과 투자 배분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에는 제도적 한계 존재
 -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간 비교·조정·재배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
 - 성과평가가 관리 수단으로는 작동하나 대전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
-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전반에서 표준화된 성과지표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
 - 사업별로 상이한 지표체계를 종합·비교할 수 있는 공통 성과지표 체계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연도 간 사업 간 성과 비교에 제약 발생
 - 성과자료를 누적·분석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는 초기 단계에 머무른 상태
-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실질적 수행기관으로서 평가를 담당해왔으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
 - 성과자료 제출 등 평가 협조 요청이 제도적 의무보다는 협의에 기반하여 추진됐으며, 이로 인해 평가 운영 과정에서 부서 간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하는 등 평가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

- **최근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일부 시작된 가운데, 향후 국가 균형성장 정책 기조와 지방재정 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성과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**
- 2026년 대전시 예산편성지침에 '과학산업분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' 문구가 반영됨에 따라, 평가의 질적 수준과 예산 연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당면 과제로 부상
- 5극3특 균형성장 기반의 지역주도 성장이 강조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 배분과 연구혁신(R&I)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책임 행정 요구가 확대될 전망
-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편성·조정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며, 지자체 차원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재정 운용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
- **이에 대전시는 연구혁신(R&I)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례화하고,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중심의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전형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시스템을 정착·고도화할 필요**

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
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V.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향

V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향

1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의 정책적 의미

-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논의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행정 개선 과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실정
 - 최근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할 때, 성과평가는 개별 사업 점검을 넘어 정책 선택과 재정 운용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추세
 - 연구혁신(R&I)사업의 경우, 성과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존재
- 최근 중앙부처 R&D 정책은 투자 규모 중심에서 성과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운영 기조가 전환되는 추세
 - 이에 따라 국비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 집행 여부가 아닌, 성과관리 체계 및 환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흐름
 - 특히 중앙부처-지자체 공동 기획 사업의 경우, 개별 사업 성과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, 평가 결과의 예산·사업 조정 활용 여부까지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
- 성과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, 연구혁신(R&I) 사업 전반에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 발생 우려
 -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 유지·조정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,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관행적 운영 구조가 고착화
 - 이로 인해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조정 및 사업 구조개편이 제한되고,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전략적 투자 판단의 한계가 동반 발생

→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운영 여건을 종합할 때,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행정 관리 수단을 넘어, 중장기적인 정책 선택과 재정 운용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관리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

→ 이에 따라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보다는,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와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고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

2 향후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 운영방향

- 대전시 연구혁신(R&I) 성과평가는 기존 개별 사업 단위 성과 점검을 넘어, 사업 전반의 구조와 투자 방향을 관리하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
 - 차년도 성과평가는 연초 평가 대상 범위와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, 연간 성과평가 운영계획을 통해 평가 일정, 평가 방식, 결과 활용 방향을 대전시와 수행기관 등에 사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
 - 단년도 평가 결과에 그치지 않고, 동일 사업의 연차별 성과를 누적·비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 제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중장기적 성과분석이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
- 대전시 연구혁신(R&I) 투자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 운영의 핵심 방향은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음
 - 성과평가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,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운영 절차와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명확화하는 방향 검토
 - 평가 대상 사업 및 수행기관의 성과자료 제출 기준, 부서 간 환류 절차, 평가 결과의 활용 방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
 - 중장기적으로 조례 등 상위 제도와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안정성 제고 필요
- 이러한 과정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성과평가 운영 기준과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·조정하는 전문적·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➔ 성과평가 대상 사업 범위 및 기준 정비

- 예산 규모, 사업 연차, 정책 전략성 등을 기준으로 연초에 평가 대상 후보군을 확정하고 연간 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반영
- 연도별·부서별 협의에 따라 평가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를 완화하여 평가 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

➔ 성과자료 제출 기준 및 최소 항목 정립

- 정산보고서와 성과평가용 자료의 목적과 활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, 성과평가용 자료 제출 기준을 별도로 관리
- 공통 성과자료 항목을 설정하여 사업 간 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, 중장기 성과 데이터 축적 기반 마련

➔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·예산 활용 지원

- 성과평가 결과를 단순 등급 부여에 그치지 않고, 사업 유지·조정·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 중심으로 정리
- 평가 결과를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공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

대전시 연구혁신(R&I) 사업
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참고문헌

참고문헌

- 부산광역시(2024), 「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」.
- 신가희·이민영(2022), “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”, 서울: 서울연구원, 정책연구.
- 인천광역시(2024), 「주요재정사업평가 최종보고서」.
- 인천광역시(2025), 「인천광역시 2025년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금 평가 최종보고서」.

저자 소개

서 채 원 ·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평가사업부 연구원
· 전화 : 042-865-0583(문의처)
· e-mail : cw9333@distep.re.kr

*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, 대전광역시와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발 행 인 이동한
발 행 처 대전과학산업진흥원
발 행 2025.12.

DiSTEP 대전과학산업진흥원
Daejeon Institute of Science & Technology for Enterprise & People

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70(오정동)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A동 5층
Tel. 042-865-0501 Fax. 042-861-4309



DISTEP
ISSUE PAPER

DiSTEP 대전과학산업진흥원
Daejeon Institute of Science & Technology for Enterprise & People

발행 2025.12.

발행인 이동한

발행처 (34430)

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(오정동)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A동 5층

www.distep.re.kr

